

KINU 정책연구 시리즈 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 박영호 · 허문영 · 홍우택

KINU 정책연구 시리즈 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 박영호 · 허문영 · 홍우택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T. 02-745-8090)

인 쇄 처 (주)예원기획

ISBN 978-89-8479-613-3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매장: 734-6818·사무실: 394-0337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vii
I. 머리말	1
II.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변화	5
1.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논의	7
2. 북한의 대중·대러 관계	8
III.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면 접촉	13
1. 미·북관계	15
2. 남북관계	19
3. 양자 및 3자 접촉	24
IV. 6자회담 관련국 입장	29
1. 북한의 입장	31
2. 미국의 입장	35
3. 중국의 입장	41

4. 일본의 입장	48
5. 러시아의 입장	50
V. 6자회담 경로 및 전망	57
1. 6자회담 전개경로	59
2. 예상 시나리오	63
VI. 우리의 대책	67
1. 6자회담 대책	69
2. 남북관계 대책	72
참고문헌	76
부록: 북핵관련 주요 일지	7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1

표·그림 목차

[표 IV-1] 6자회담 관련국의 입장 비교	55
[표 VI-1]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	71
[그림 V-1] 북핵문제의 전개 경로	61

1. 서론

- 2008년 이후 한반도 정세는 갈등과 긴장이 반복됨.
 - 2008년 3월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추방,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2009년 3월~8월 개성공단에서 유성진 씨 억류 등으로 상황 악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경색
 -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도 악화되면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북핵검증합의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중단, 2009년 상반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 2010년 11월 우리농농축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이하 UEP) 공개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우려 고조

- 하지만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함.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접촉(7.22), 뉴욕에서 미·북대화(7.28~29)
 - 러시아 동부의 울란우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8.24)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는 이른바 6자회담을 위한 ‘3단계’ 접근 방안에 따라 전개되고 있음.
 - 중국은 2010년 ‘미·북 양자회담 → 6자 예비회담 → 6자 본회담’의

3단계 안을 제시했으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가 경색으로 무산

- 지난 4월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남북 수석대표 간 회동 → 미·북 간 회담 → 6자회담’의 새로운 3단계 안을 제시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1년 미·중 정상회담 이후 다각적으로 전개된 한반도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개양상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6자회담 대책

- 우선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 핵문제 협상에서 한국은 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 첫째,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핵폐기의 원칙 위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전망이 필요,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획득 요망
 - 둘째,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우리의 전략에 입각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6자회담의 의제와 이행방안, 합의문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우리의 입지를 확보

- 그랜드 바겐에 입각하여 북핵폐기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북한체제 보장, 대북경제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관련국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핵폐기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하되, 구체적 이행은 ① 비핵화 초기조치, ② 비핵화 기반조성, ③ 비핵화 심화, ④ 비핵화 완성의 4 단계로 구분하여 이행방안 마련
 -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상응하여 6자회담의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프로세스를 연계
- 한편,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될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핵안보 정상회의의 우선 과제는 워싱턴에서 개최된 1차 회의의 합의 및 공약사항의 이행 점검
- 6자회담 재개 시 우려되는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대립양상이 고착되는 양상인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3. 남북관계 대책

- 원칙의 유지
- 남북 핵회담 또는 6자회담 개최 시 6자회담 내에서의 남북 핵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력 확보
 -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을 도모
 - 한·미동맹 및 우리의 군사력에 의한 대북억지력 확보에 의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음으로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

- 대북지원 및 경협조치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
- 대북정책의 유연성 발휘
-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및 국내 선거에서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남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 평화관리에 주력
 - 6자회담 재개, 남북대화 등에 따른 5·24 조치의 단계적 완화
 - 인도적 지원의 확대,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로 관계 개선의 여건 조성
 -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에 의해 남북관계의 복원
- 인도적 지원의 확대
- 정부 차원의 인도지원은 북한이 국제기준에 준하는 분배감시활동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직접지원을 추진하며 대규모 일회성 지원보다는 소규모 다회성 지원방식으로 지원
 - 북한이 반대할 경우 감시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
 -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민간단체의 지원한도 상향조정 등 인도지원 활동을 장려
 - 북한의 긍정적 태도변화와 연동하여 지원규모와 품목을 조정
-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은 5·24 조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남북관계 개선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체육 및 학술분야 교류협력을 추진(남북 축구대회 개최,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 공동추진 등)

- 남북관계의 복잡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관급 회담을 개최함.
 - 천안함·연평도 도발사건과 관련 북측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수용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통한 재발방지방안 논의
 -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재개 등에 관해 논의
 -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상봉 및 납북자·국군포로, 신속자씨 모녀사건 등 문제 해결에 역점

- 통일담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함.

I. 머리말

- 2008년 이후 한반도 정세는 갈등과 긴장이 반복됨.
 - 2008년 3월 남북관계에서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추방,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 2009년 3월~8월 개성공단에서 유성진 씨 억류 등으로 상황 악화
 - 더욱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경색

- 또한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도 악화됨.
 -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북핵검증합의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중단
 - 2009년 상반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
 - 2010년 11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이하 UEP) 공개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우려 고조

- 하지만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함.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접촉(7.22)
 - 이어 뉴욕에서 미·북대화(7.28~29)
 -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 재개
 - 더욱이 러시아 동부의 올란우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8.24)
 - 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방중 3개월 만에 중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2년여 동안 중단되었던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대두

I
II
III
IV
V
VI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는 이른바 6자회담을 위한 ‘3단계’ 접근 방안의 따라 전개되고 있음.
 - 중국은 2010년 ‘미·북 양자회담 → 6자 예비회담 → 6자 본회담’의 3단계 안을 제시했으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경색으로 무산
 - 지난 4월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남북 수석대표 간 회동 → 미·북 간 회담 → 6자회담’의 새로운 3단계 안을 제시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1년 미·중 정상회담 이후 다각적으로 전개된 한반도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개양상을 전망하고자 함.
 -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및 남북관계의 전망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정책방향을 제시

Ⅱ.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변화

1.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논의

- 2011년 1월 1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최초로 미국을 국민 방문하여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개 부문 41개항의 공동성명문을 발표함.
 - 총 41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문항에서 가장 긴 18항
 - 18항은 첫 문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북핵문제와 6자회담을 한반도 문제의 중심 이슈로 취급
 - 또한 미·중 공동성명은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
 -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강조

- 천안함·연평도 사태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9·19 공동성명’과 ‘6자 회담’은 각각 3회와 2회씩 거론됨.
 - 요약하면 미·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긴장 해소에 공감하고
 -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 다음 단계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 특히,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이 중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는 그 동안 한·미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이고, 6자회담의 재개는 중국이 강조한 것이기에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절충할 필요¹⁾

¹⁾ 이봉조, “ARF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안보현안분석』, Vol. 61 (국방대학교 국가안전정보장문제연구소, 2011.7.29).

- 또한 워싱턴에서 개최(5.9)된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후 발표한 공동발표문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함.
 - 6자회담 재개 및 남북대화를 위한 미·북접촉, 중·북대화, 남북대화 등이 다면적, 동시다발적으로 전개

- 북한이 앞으로 개최될 남북대화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우리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요구되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의 방향이 결정될 것임.

2. 북한의 대중·대러 관계

가. 중·북관계

-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 및 협력확보, 후계체제 인정, 대미접근을 위한 중국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은 지속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두고 중국의 경제지원이 절실한 실정임.²

² WF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UNICEF) 등이 2011년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북한의 9개도, 40개 군을 방문하여 실태 조사한 결과인 『WFP/FAO/UNICEF 긴급 북한 식량조사 보고서』는 지난해 여름의 홍수와 겨울의 혹독한 추위,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해 600만 명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함. WFP, FAO & 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ch 24, 2011), p. 4; FAO, *GIEWS(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

-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대해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베이징 회담(4.11)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 문제가 다시 대두
 - 그리고 5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김정일은 중·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빠른 시일 안에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³
 - 귀국 후에는 ‘불멸의 대장정’이었다며 중·북친선 관계를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의 제안에 따른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제기

- 또한 북한과 중국은 중·북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하여 각각 대표단을 상호 파견함.
 - 북한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7.9~12)
 - 중국은 장더장(張德江)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7.10~13)

-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Flood Update (August 8, 2011), <<http://www.fao.org/gIEWS/english/shortnews/DPRK-Update-8-8-11.pdf>>. 지난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북한에 쏟아진 폭우로 5만9340ha(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매몰 혹은 유실되었는데, 이것은 북한 전체 농경지의 5%에 해당함.

³- 『연합뉴스』, 2011년 5월 26일.

I
II
III
IV
V
VI

- 특히, 중국은 동북 3성 경제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춘, 길림, 도문’ 지역의 경제개발계획인 ‘창-지-투’ 개발계획과 관련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필요성 인식
 - 5월 중·북 정상회담 직후 중·북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황금평 (黃金坪) 경제구와 라선특구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
- 북한의 라진, 선봉 항만은 ‘창-지-투’ 개발계획의 핵심적인 해상물 류거점으로 선정된 곳임.
- 황금평 개발과 관련해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당 시 합의
 - 합의안에는 2010년 12월 31일 착공식을 했던 신압록강대교 건설 비용(17억 위안)을 중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
 - 북한과 중국은 이 다리 건설과 함께 인근 압록강 섬인 북한의 황 금평 자유무역지구 합작개발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⁴
 -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상임위원회를 열어(6.6) 황금평과 위화도경 제지대 개발계획을 추진⁵
 - 북한과 중국은 황금평과 라선특구를 공동 관리하는 ‘개발합작연합 지도위원회’를 구성
 - 천더밍 중국상무부장과 장성택 북한노동당중앙행정부장의 공동 사회로 중·북 라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 위화도 개발협력관련 2 차 회의가 중국의 요녕성과 길림성에서 개최(6.7~9)

⁴- 『연합뉴스』, 2011년 5월 9일.

⁵- 『연합뉴스』, 2011년 6월 6일.

- 이 회의를 통해 라선자유경제무역구에 기초시설·산업공업단지·물류망 등을 건설하고 관광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황금평에 정보·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경공업 등을 발전시키기로 결정⁶
- 김정일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다시 중국을 경유하여 동북3성 지역의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함.
 - 김 위원장은 방중 첫째 날(8.25)인 네이멍구자치구의 후룬베이얼(呼倫貝爾)에서 중국의 6세대 국가지도자로 거론되는 후춘화(胡春華) 네이멍구 당서기가 주최하는 환영연회에 참석, 둘째 날(8.26)인 헤이룽장성 치치하얼(齊齊哈爾)에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접견
 - 중국을 경유하여 귀국한 김정일 위원장의 의도를 분석해보면 귀국길의 노선을 단축하며(실제 1,500km를 단축), 중국의 북한 대중, 대러 등거리 외교에 대한 불만을 잠식시키고 6자회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중국 측에 설명하려는 의도

나. 러·북관계

- 북한은 6자회담 재개와 경제지원 요청을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
 - 김정일 위원장은 러시아를 철도로 방문(8.21~24)하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동부 시베리아 부랴티야 자치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시 외곽에서 개최(8.24)

⁶- 『연합뉴스』, 2011년 6월 9일.

- 양 정상은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경제협력 확대 등에 합의
 - 이어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등 경제협조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도 합의
 -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라는 에너지협력 의제가 부상
- 정상회담 후 만찬 연설을 보면, 두 정상 간 우선순위에 차이가 존재함.
- 김 위원장은 러·북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메드베네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업까지 거론하면서 러·북 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조
- 이후 평양에서 제4차 회의(2007. 3) 이후 4년 5개월 만에 러·북 경제협력위원회 회의가 개최됨(8.26).

Ⅲ.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면 접촉

1. 미·북관계

가. ARF 회의(2011.7.22) 이전

- 북한은 민간과 1.5트랙을 통해서 미국과 접촉해 왔음.
 - 미·북 간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했는데, 이는 미국을 방문한 북한 인원의 수에서도 확인
 - 미국 국토안보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미국을 찾은 북한 국적자는 139명으로 작년 상반기의 89명보다 50명 증가⁷⁾
 - 또한 1.5트랙의 경우 미국 아스펜 연구소 독일지부 주최로 미국 전직 고위당국자들과 북한 측 대표의 토론회(3.25~26) 개최
 - 뮌헨 인근 에히겐에서 리처드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부 차관, 에번스 리비어 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등 6명의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과 리근 국장, 최신희 미국 국 부국장을 비롯, 북한의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조선적십자회 등 6명이 참석했던 토론회(3.27~29) 개최 등⁸⁾
- 한편, 미국은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핵보유 능력을 과시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공개함에 따라 북한에게 제재를 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나쁜 행동

⁷⁾ 『조선일보』, 2011년 8월 8일; *Radio of Free Asia*, 2011.8.6. 2011년 2월 양국 간 학술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북한 과학대표단, 3월 구글 본사 등을 돌아본 북한 경제대표단, 6월 미 동부 3개 주에 시범 공연을 한 북한선태권도 시범단, AP통신 평양 지국 개설 논의를 위해 방문한 조선중앙방송 대표단 등이 미국을 방문함.

⁸⁾ 『경향신문』, 2011년 3월 30일.

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면서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하여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적 인내’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⁹⁾

- 더욱이 2012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부는 금년 하반기까지 북핵문제에 있어 일정 정도의 성과가 필요한 입장
- 따라서 오바마 미행정부는 한편으로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접촉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나. ARF 회의(2011.7.22) 이후

(1) 1차 미·북회담

- 발리에서 남북 핵회담이 성사되자, 3단계 방안에 입각하여 미·북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됨.
- 북한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대표로 한 북한 측과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중심으로 한 미국 측은 뉴욕에서 직접 대화(7.28~29)
- 회담 직후 김계관 부상은 “뉴욕회담에 만족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다자회담 전에 쌍무적 만남이 계속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
- 북한 외무성도 문답형식을 통해 “미·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미·북 고위급 회담이 진지하고

⁹⁾ 이인호,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41호(2011년 봄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p. 39.

-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고 발표(8.1)
- 아울러 북한은 미·북회담의 주요 의제가 미·북관계 개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동시행동 원칙 하 『9·19 공동성명』 이행이었다고 강조
 - 북한이 뉴욕회담에 나선 것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관심보다 ‘미·북관계 발전’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
 -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매우 생산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
 - 미국 국무부는 단순히 탐색 회담 수준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 현안을 두루 다룬 예비회담이었다고 그 성격을 규정
 - 미·북회담을 전후한 미국과 북한 간 공식적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은 뉴욕회담을 미·북 간 ‘고위급 회담’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의미 있는 ‘미·북 직접대화’로 규정
- 뉴욕 미·북대화 이후 미·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 관측
- 미·북 간 미군유해발굴 회담 재개(8.19)
 - 김정일 위원장, “조건 없는 6자회담을 개최하자” 발언(8.27)

(2) 2차 미·북회담

-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미·북대화가 개최됨(10.24~25).
- 북한은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전제 없는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6자회담 재개 전 사전조치 일괄 이행’ 입장을 고수하여 팽팽한 대치
 - 특히,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사망(10.20)이 미·북대화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 회담을 마친 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일련의 커다란 전진이 있었으며, 1차 대화 때 합의한 데에 따라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공개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우 유용한 회담이었으며, 북한과 긍정적이고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평가
 - 그러나 김계관 부상이 연내에 추가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시간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
 - “일련의 커다란 전진”으로 추정되는 대목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일부라도 수용했을 가능성과 사전조치 이행에 대북 식량지원이 연계되어 논의되었을 가능성으로 주목
- 한·미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비롯한 모든 핵활동 중단, ②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③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가운데 일부를 북한이 수용하고 이에 따른 대북 식량지원 연계에 이어 6자회담 재개 합의로 방향성을 잡았을 것이라는 분석 가능
- 이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할 방침을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집행분 33만t’을 한꺼번에 지원하기보다 일정량을 나누어 북한에 전달하는 ‘분할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전언

2. 남북관계

가. ARF 회의(2011.7.22) 이전

- 2011년 연초부터 북한은 대남 제의를 하는 등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며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음.
 -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1.5)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의 무조건 개최를 주장
 - 이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의 개최를 공식 제안(1.8)하는 동시에 과거에 진행되었던 회담 및 새로운 현안과 관련한 회담 재개를 제의
 - 북한의 대화제의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초래된 압박국면에서 벗어나는 한편, 남북대화를 계기로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한 실리적인 목적을 소지한 것으로 이해
 - 아울러 미·북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측면이라고 이해

- 그러나 남북대화는 다음 2가지 조건과 관련되어 있음.
 - 첫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문제
 - 둘째,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의 선행문제

- 북한은 1월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명의로 김관진 남한 국방부장관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함.

I

II

III

IV

V

VI

-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화공세에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비핵화와 관련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데 대한 대응 조치로, 군사적 긴장 완화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한 태도
 - 그러나 회담 결과 성과는 부재
- 또 북한은 지진국장 명의로 “백두산 화산공동연구와 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는 전통문을 보내왔음(3.17).
 - 이것은 천안함 폭침 도발 1주기를 앞두고 북한이 비군사적 현안을 매개로 우회적인 당국회담 제안
- 한편, 북한은 2010년 6월 베이징(北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이 있었음을 폭로(2011.5.9)하여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음.
 - 아울러 북한은 비핵화에 합의하면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표명

나. ARF 회의(2011.7.22) 이후

(1) 1차 남북 핵회담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함.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총회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부 부상의 회동(7.22)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라는 다자 외교공간에서 열린 남북 회담이었지만 비핵화를 의제로 개최되는 남북 간 공식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담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의 수석대표 회동(2008.12) 이후 2년 7개월만의 회동
 - 특히, ‘남북한 간 최초의 비핵화 회담’이라는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6자회담에 종속된 양자회동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만이 만나 핵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¹⁰
- 이 회담이 갖는 보다 큰 의미는 중단되어 있는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중요한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임.
- 중국이 제안하고 참여국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 있던 3단계 회담 재개 방안의 단초로 작용
- 남북 핵회담의 분위기속에서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승인되기 시작함.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은 7월 26일부터 4차례에 걸쳐 밀가루 1천462t 등을 북한에 지원
 - 이는 「5·24 조치」 등으로 중단됐던 대북 밀가루 지원이 8개월여 만에 재개
 - 이후 3주 남짓한 기간 동안 민화협, 천주교 등 4개 단체가 밀가루

¹⁰- Bruce Klingner, “Talks about Talking Okay, but the Ball is in Pyongyang’s Court,” *The Heritage Foundation WebMemo* (July 26, 2011). p. 1.

1천462t 등 8억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

- 북한 수재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제공됨.
 - 표면적으로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지만 남북협력기금으로 비용이 조달된다는 점에서 성격은 민간단체의 지원과 차이
 -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50억원 상당의 수호물자 지원을 제의했고, 물품 대금 45억원을 비롯해 부대경비(5억원), 사업관리비(5천만원) 등 총 50억5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의결
 - 첫 지원물품은 9월 초에 전달

(2) 2차 남북 핵회담

-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다시 회동함(9.21).
 - 남측은 미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후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먼저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입장이어서 평행선을 달렸으나 1차 회담에 이어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추정
 -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그랜드 바겐이 남한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 모두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6자회담의 재개에 적극적인 모습

(3) 남북관계 진전 모색

- 인도네시아 발리(7.22)와 중국 베이징(9.21)에서 두 번의 남북

- 비핵회담을 갖는 사이에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보류되었던 각계각층의 방북요청이 승인되어 남북관계의 여건을 개선함.
- 이산가족·대북지원 등 인도주의 사안, 개성공단 관련 문제, 종교·예술 등 비정치 부문에서부터 관계 개선
- 민간 차원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3.31 재개)
 - 7월 25일 이후 민간 차원 밀가루 지원도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여 승인
 - 분배 현장 모니터링은 밀가루 지원을 전후로 예외 없이 실시
 - 조계종,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고불법회 참석 차 방북(9.3~9.7)
 -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유니세프 친선대사의 평양 방문(9.12~15)
 - 11월 남북교향악단 합동 공연 추진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종단 대표 방북(9.21~24)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개성공단 방문(9.30)
 -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투자환경 개선조치를 실시함.
 - 홍준표 대표 개성공단 방문 당시 공단 내 입주기업 요청 수용 및 애로 해소 차원에서 일부 완화 조치 발표
 - 「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기업들의 건축공사 재개 허용(건설 중단 기업(7개) 공사재개, 증축중단 기업(5개) 공사재개 검토)
 - 개성공단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 추진(소방서: 11월 착공·

I
II
III
IV
V
VI

내년 완공, 의료시설: 내년 착공·완공 예정)

-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4.5km) 보수 및 출퇴근 버스 확대(20km → 40km)

- 국회 차원에서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통일세법」 제정안 등 총 6건의 법률 제·개정안 발의(상임위 계류 중)

3. 양자 및 3자 접촉

가. 양자 협의

(1) 한·미협의

-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노력함.
 - 미국은 2011년 연초부터 6자회담 이전에 먼저 남북회담 개최 지지
- 1차 남북 핵회담(7.21) 후 한·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비핵화 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논의함.
 - 김성환 외교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남북 비핵화 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3단계 접근안을 중심으로 6자회담 재개 방안 조율
-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9.13~16).
 - 한·미 FTA 비준과 함께 6자회담 재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

-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파격대우하여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함.

(2) 한·중협외

- 발리에서 있었던 남북 비핵화 회담 이후 바로 한국과 중국이 양자간 회담을 가지면서 6자회담 재개에 상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 북한과도 긴밀한 협의로 회담 재개에 적극적
-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했던(10.24)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함(10.26).
 - 리 부총리는 “김 위원장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전언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에 중국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면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
-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국 측의 6자회담 신임 수석대표로 임명되면서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첫 회동을 가짐(11.2).
 - 최근 열린 미·북 간의 2차 제네바 양자회담의 결과에 대해 평가를 갖고 6자회담 재개 방안과 절차를 논의

(3) 미·중협의

-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합의함.
-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이 APEC정상회의에서 만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11.12)에서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 중단을 위해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
 - 클린턴 장관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 매우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이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

나. 3자협의

(1) 한·미·일 3자협의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ARF 회담에서 한·미·일 3자 외교 부장관이 만나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논의함(7.22).
 -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미·북대화,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소위 ‘북핵 3단계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

(2) 남·미·북 민간 3자협의

- 미국 조지아대 국제문제연구소(글로벌비스)가 ‘남·미·북 3자 트랙Ⅱ’ 토론회를 주최함(10.17~20).
 - 민간인들 간의 토론회 형식을 가졌지만 사실상 1.5트랙의 형식
 - 3자 합의문 발표: 남북 간의 정전 상태를 항구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평화체제로 대체, 서해상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사건들에 비춰 앞으로 유사한 사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대북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조치를 포함한 활발한 협력과 교류로 신뢰 구축 필요 등 6개항

I

II

III

IV

V

VI

IV. 6자회담 관련국 입장

1. 북한의 입장

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

-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묵시적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핵무기 추가 및 핵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지원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북한은 핵을 자신의 생존과 직결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보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음.
 - 북한은 핵프로그램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한 방어적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핵포기를 위해서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

-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이 성공한 이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함.

- 특히, 북한은 6자회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공개로 핵협상력의 수위를 높이고자 함.
 - 북한은 2010년 11월 12일 영변핵시설을 방문한 전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Los Alamos National Lab) 소장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에게 비밀에 가려졌던 우라늄농축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¹¹⁾

¹¹⁾ Siegfried S, Hecker, "What I Found in North Korea: Pyongyang's Plutonium Is No Longer the only Problem," *Foreign Affairs*, (December 9, 2010),

- 북한은 이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며, 미국과 핵군축회담을 주장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7월, 1년 7개월 만에 재개된 미·북 양자대화에서 미국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평화협정 논의와 미·북관계 정상화,’ ‘대북 제재 해제’ 등 기존의 주장을 반복함.

나.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입장

-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북 양자회담을 우선시하며, 6자회담을 미·북 양자회담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미·북관계의 지렛대로 이용하여 왔음.
 - 6차 6자회담이 종료된 직후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미·북관계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김정일도 6자회담 당사국들과 평화적으로 지내고 6자회담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긍정적인 입장
-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때에는 6자회담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며 회담의 틀을 벗어나려 한 반면, 위기가 장기화되어 외교적 압력이 거세어지거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왔음.

<<http://www.foreignaffairs.com/node/66970>>.

- 북한은 6차 6자회담이 중단된 이래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면서 6자회담에 복귀할 생각이 없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면서도 대화할 수는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 북한은 2009년 9월 4일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명의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적은 없다”고 표명
 - 이는 6자회담이 북한의 자주권과 평화적 핵 이용권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한 자신은 참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6자회담 자체보다는 논의 내용과 구도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 가능

- 2011년 들어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 위주에서 벗어나 6자회담 관련국을 대상으로 한 다변협상을 수용함.
 - 2차례의 남북 핵회담 개최
 - 러·북 정상회담(2011.8)에서 김정일위원장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으며,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

다. 사전조치 이행에 대한 입장

-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과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

I
II
III
IV
V
VI

라토리엄 선언 등 한·미가 제시한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에 대해서는 6자회담 재개 후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북한은 “일방적인 전제조건들을 내세우거나 여러 대화들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놓으려는 주장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응수
- 오히려 북한은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 등을 주장

○ 북한은 미·북회담(7.29, 10.24)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동의 하였으나 사전조치, 특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 북한은 미국의 사전조치 이행 요구에 대해 원자력의 자주적 이용 권한으로 대응

○ 북한은 러·북 정상회담(8.24)에서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와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의 유예를 시사함.

-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 주면서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대량살상무기 실험 유예에 대해서만 사전조치 이행을 한정시키도록 러시아의 동의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

라. 남북관계 및 양자대화에 대한 입장

○ 북한은 남북 비핵화회담(7.22, 9.21)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문에 불과하고 미국과의 협상이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음.

- 북한은 중국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 3단계 안(남북비핵화회담→미·북회담→본회담)에 합의함으로써 중·북 공조를 과시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중국의 지지를 활용함.
- 아울러 북한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러시아의 6자회담 중재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함.

2. 미국의 입장

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

-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못지않게 비확산에 관심을 두고 있음.
 - 2010년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핵물질의 확산방지를 최우선 국 제안보과제로 제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 미국은 2012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여건을 위해서도 북핵문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대화와 압력 병행’ 전략 아래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기회를 열어놓으면서도 원칙적이고 단호한 정책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 공세적 관여(Aggressive Engagement) 정책 기조
 - ‘비핵화 없는 미·북 관계 정상화 불가능’ 입장 강조로 북한 압박

I

II

III

IV

V

VI

- 대북정책의 수단으로는 실용주의의 입장에서, 국제협력·국제제도의 강화, 외교적·경제적 수단을 중시하면서도 외교적 수단과 함께 군사적 수단 활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의 공개 이후 미국은 우라늄농축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함.
 - 첫째, 우라늄농축시설은 은닉이 용이하기 때문에 북한이 농축시설을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가동하여 얼마나 더 많은 핵물질을 생산하는지 파악 한계
 - 둘째, 일단 핵농축 기술을 터득하면, 고농축과 농축핵무기 제조에 이르는 과정이 기술적 장애요인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고, 특히 농축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의 용이성과 작은 부피로 인해 해외이전이 용이하며, ‘핵테러’에 사용될 가능성 농후
 - 셋째,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대규모 현대식 농축시설을 갖추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국제비확산체제와 수출통제체제의 허점을 보여 주고, 심지어 테러집단도 어렵지 않게 농축 장비 또는 농축우라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 대두

나.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입장

- 미국은 북핵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견지하면서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외교협상의 틀로 유지하고 있음.
 - 미·북대화는 6자회담 재개 유인을 위한 수단

- 미국은 또한 북한의 핵 포기를 유인하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 현안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 하였음.
 - 페리 보고서 제안과 유사한 포괄적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 접근 강구 및 추진
 - 북핵 해결 촉진 방식으로 평화체제, 관계정상화 등 양자 관계의 현안을 포괄하여 협상
 -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과 포괄적 패키지 (Comprehensive Package)는 공통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 등 기존의 관련 합의들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합의의 이행에 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 전에는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이 증대되고,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1.28, 신년 국정연설)
 -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비가역적인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협상 복귀에 대한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1.30, 우드로윌슨센터 연설)
 -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과 2007년의 공약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해제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2.2, 방한 기자회견)

I
II
III
IV
V
VI

- 2011년에 들어서도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견지되어 왔으며, 미국은 6자회담이라는 대화 자체보다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클린턴 국무장관은 “UEP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9·19 공동성명』의 위반”(1.14)
 - 스타인버그 국무 부장관은 “북한의 UEP는 『9·19 공동성명』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1.26)
 - 도널런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은 UEP 중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되는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불가역적 조치를 취해야 함”(3.31)

- 이후 미국은 한국, 중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다 양한 양자 및 다자 접촉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회담 재개의 올바른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그 단계적 수순으로 3단계 구상에 합의함.
 - 3단계 구상: 북한의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 미·북대화 → 6자 회담
 -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 회담(4.13)에서 “한·미는 단계적 6자회담에 대한 북의 반응을 주시” 언급

- 이에 따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관련국과의 협력 외교를 추진하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 일관성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의 UEP가 「9.19 공동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의 명백한 위반으로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G8 외교장관회의(3.14~15)에서 채택된 의장요약문은 ①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여 이를 규탄하고, ② 북한에게 국제의무 및 공약을 이행할 것 등을 촉구

다. 사전조치 이행에 대한 입장

- 미국은 6자회담 재개 등 사태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한·미 외교장관회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 남북관계 개선 조치 등 분명한 행동 변화, 도발행위 중단, 비핵화 관련 조치 등을 강조
- 북한의 협력 유인을 위한 대북 식량지원 재개 모색
- 미국은 남북 비핵화 대화에 따라서 진행된 북한과의 접촉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 접촉임을 강조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 제시하고 있음.
- ① UEP 중단, ② IAEA 사찰관 복귀, ③ 핵 및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
- 미국은 북한의 UEP가 계속 진전되는 것을 우려하여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카드 활용, 미군 유해 발굴 재개, 북한 당국자의 1.5/2 트

랙 회의 참여 허용 등의 조치들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2012년 대선 국면을 맞이할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이며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빈 라덴 사살, 카다피 사살 등 국제적인 공적(公敵) 문제를 해결하고 이라크 철군이 진행 중임에 따라 북핵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북핵문제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농후
- 따라서 북한이 미국 측의 요구에 일정한 정도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의 재개를 서두를 가능성은 희박

라. 남북관계 및 양자대화에 대한 입장

-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 6자회담 재개 및 미·북대화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음.
 - 미국은 한·미공조에 입각하여 남북대화와 미·북대화의 병행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만을 중시하는 북한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
-
-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틀을 지지하였으며, 특히, 1차 및 2차 남북핵회담이 개최된 후 미·북대화를 개최함으로써 남북회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음.

-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 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실시하고 남북대화를 수용하여 한반도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3. 중국의 입장

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

-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부정적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함.
 - 중국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및 중국의 국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
 -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한국과 대만, 일본에 핵개발의 빌미를 주어 핵이 동북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중국은 핵보유국에 둘러싸이게 되는 안보위협을 경계
 -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압력과 무력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 주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이것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취할 경우 북한의 체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중국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
-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6자회담 성공을 통해 중국은 G2의 위상 확보를 기대
 - 중국의 기본 입장은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로부터 분리해 북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

I
II
III
IV
V
VI

- 중국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거나, 북핵문제에 의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욱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정책에 반대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강화를 지속하여, 궁극적으로 대북영향력 확대 기도
 -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하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는 부차적인 과제로 간주
-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고 현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는 것임.
- 북한정권이 무너져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면 중국은 한국과의 국경에서 미군과 대치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전선에서 미국을 상대해야 할 가능성을 경계
 - 또한 북한의 붕괴로 인해 수많은 난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될 경우 국내 정치와 경제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
 -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원치 않는 전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
 -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막는데 주력
-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지지

- 2010년 11월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서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며 판단을 유보
 -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 정세 악화를 막아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
- 중국은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실험을 단행한 뒤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에 일부 동참하는 한편, 북한 핵폐기보다 북핵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
- 후진타오 주석은 2011년 1월 19일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며,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안보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
- 또한 중국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표시
 - 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UEP 존재를 확인하는 데 있어 ‘선(先)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모호성’을 유지
 -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유엔 안보리 상정을 차단하려는 제스처로 해석
 - 결론적으로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UEP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6자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나.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입장

- 중국외교의 일반적 관행이자 원칙은 ‘불간섭원칙’으로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불간섭원칙’과 ‘소극적 관여’정책에 따라 국제적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며 항시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양자해결원칙을 주장하여 왔음.
 - 그러나 2003년 1월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후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1차 북핵위기 당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중국은 미·북 양자 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기 시작
 - 이는 2003년 후진타오가 최고통수권자 지위를 계승한 이후 외교전략을 기존의 도광양晦(韜光養晦) 전략에서 화평발전(和平發展) 전략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
 - 화평발전은 중국이 자신의 국력에 맞는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고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이 이전의 불간섭원칙에서 전환하여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이러한 화평발전 전략의 측면에서 평화지향적인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분석
- 중국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틀을 안착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독주를 막고 중국의 입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함.
 - 중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필요한 외교적 협력을 제공한 대가로 인권이나 환경문제 등에서 일정한 미국의 양보를 획득

- 과거 9·11 사태의 경우 미국에 협력한 대가로 중국의 신장지구에서의 탄압 등을 눈감아 주고 경제적·외교적 마찰을 줄였던 것이 선례
- 종합하면,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자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위신향상이라는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중재자의 입장에 충실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그것이 군사적인 제재로 이어지거나 북한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함.
- 2010년 이후 중국이 한반도문제, 조어도문제 및 남중국해문제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수세에 처해 있는 바, 평화이미지를 고취하고 외교적 주도권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려 함.
 -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대표는 3월 한·미와 북한 사이의 입장 차이를 절충하여, ‘남북대화 → 미·북회담 → 6자회담 개최 3단계 구상’을 제시함.
- 2011년 중국은 남북한에게 관계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한편, 미·중 및 북·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대화를 개최하여 미·북에게 조기 6자회담 재개를 설득하고, 유관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기여할 것임을 천명해 왔음.

I
II
III
IV
V
VI

다. 사전조치 이행에 대한 입장

- 한·미가 북한에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조기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조건 설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의 우리농농축프로그램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여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견지
 - 북핵 위기관리 차원에서 IAEA 사찰단 복귀와 WMD 모라토리엄 선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선제조건을 제시할 경우 6자회담 조기 재개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주장

- 중국은 UEP 문제에 대해 북한이 우리농 농축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한 후에도 선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중국의 추이텐카이 외교부 부부장은 2011년 1월 14일 북한의 우리농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내 이해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관련 시설을) 본 적이 없고 미국 전문가들이 본 것”이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 핵시설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고 발언

-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의 과거 처리 경험에 비춰봤을 때 UEP 문제를 처리하기에 더 적합한 무대는 안보리가 아닌 6자회담”이라고 강조해 북한 우리농 농축 문제의 안보리 상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한·중 6자 수석회담(2011.2.10)에서 북한 UEP를 안보리 무대에서 논의하게 되면 새로운 제재 결의가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반발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6자회담 내 처리 입장을 재확인

라. 남북관계 및 양자대화에 대한 입장

- 중국은 북한과 다양한 형태의 회담 및 상호 방문을 통해 북한의 안정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함.
- 아울러 중국은 한·중 및 미·중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며 중재자로서 중국의 입지를 확대하려고 함.
- 중국은 한반도평화를 위해 당사자인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대화를 우선 개최하고 뒤이어 미·북 대화와 6자회담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는 3단계 구상안을 제시함.
- 또한 중국은 미·북이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개최 이전에 미·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미·북이 양자대화를 통해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I

II

III

IV

V

VI

4. 일본의 입장

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

-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은 북핵이 일본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임.
- 아울러 일본은 북핵 개발과 함께 북한 미사일이 일본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도 일본의 주권 및 인간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 상정
- 일본은 북핵문제 대두 이후 한·미·일 3자 정책공조에 입각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대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왔음.

나.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입장

-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 때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시도한 이후 6자회담 틀 내에서도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함.
 - 2008년 9월 등장한 아소 정권은 대북정책과 관련, 북핵문제와 납치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 표명
- 2009년 5월 제2차 북핵 실험 이후 일본은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 함께 양자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여 대북 압박전략을 추진하였음.

- 2009년 9월 전후 54년만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하토야마 민주당 연립정권이 출범, 완화된 대북정책이 기대되었으나 납치문제, 북핵 문제 등에 대하여 자민당 정권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함.
-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기반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한편, 6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임.
 -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강화

다. 사전조치 이행에 대한 입장

- 2010년 6월 출범한 간 연립내각은 기존의 입장을 이어받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 및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6.11)하였으며, 2011년 9월 출범한 노다 연립정권도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총리의 잦은 교체 등 국내정정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대북정책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으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특히, 미·일동맹이 강화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부응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미·일 3자 공조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

I
II
III
IV
V
VI

여출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향후 계속 유지될 것임.

- 최근 한·일, 미·일 등 한·미·일 공조체제 아래서 이루어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한·미·일이 견지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
- 향후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일본이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 부재

라. 남북관계 및 양자대화에 대한 입장

- 일본은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긴장해소를 위해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음.
- 아울러 일본은 6자회담 재개 및 미·북대화의 진전 속도와 맞추어 일·북대화를 재개하고 국교정상화회담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

5. 러시아의 입장

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

- 러시아는 북핵불용의 원칙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음.
 -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소형화되어 러시아 내의 체첸과 같은 독립추구세력에게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
 -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유라시아 대륙에 존재하는 다양한 반(反)러시아 단체에 핵기술이 전파될 것을 우려하는 것과 유관

- 그러나 러시아는 군사력동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함.
-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지만, 북한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거나, 북한과의 관계 냉각으로 중재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원치 않음.
 -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10월의 핵실험 이후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 결의 1695호, 1718호』에 찬성
 - 그러나 러시아는 ‘일괄타결안’에 기초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6자 회담 유지가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자, 자신의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적절한 메커니즘이라고 판단
 - 러시아는 실용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북한의 NPT 체제 복귀 및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며 세계식량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차 북 핵실험 후인 2006년 11월 북한에 12,800t의 곡물을 전달
-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려는 한·미와 6자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하려는 중·북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의 안보리 상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국제 비확산체제 유지 정책을 견지하려는 경향에서 기인
-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 견제와 다자적 국제질서 추구,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라는 러시아의 외교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음.

I
II
III
IV
V
VI

- 러시아의 현실주의적 실용주의 외교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과 함께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해 미국과 제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 러시아는 북핵문제로 미국과의 대립이 첨예화되는 것을 피하면서 역내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는 양면적 목표 추구

나.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입장

- 러시아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북아에서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만들려는 입장을 지니고 있음.
 -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방법을 선호
 - 아울러 러시아는 6자회담에 참여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
-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북한의 입장에 가까운 태도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을 설득하여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여 왔음.
 - 그러나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보다 북한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면에서 중국보다 제한적
- 6자회담 중단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조하여 왔음.
 - 2009년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6자회담 불참을 선언

- 러시아 외무부는 이에 대해 즉각 유감을 밝히고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에 대해 “유감스러울 뿐”이라며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
 -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조치는 6자회담의 성과를 위태롭게 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조치가 결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2011년 8월 러·북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확인되었음.

다. 사전조치 이행에 대한 입장

-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과거 러시아는 6자회담의 조건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대립할 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안전보장과 핵폐기 진행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먼저 지급하라는 북한의 주장을 옹호
 - 하지만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자 러시아는 UEP 문제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 앞으로 6자회담 재개 시 UEP 문제에 관해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의 ‘우군’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
- 러시아는 2011년 3월에 열린 러·북 외무부간 정례 협의회에서 6자회담의 조건 없는 복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임시 중지, 국

I
II
III
IV
V
VI

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의 영변 핵시설 복귀,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관련시설 사찰 실시 등을 북한에 요구하였음.

- 리·북정상회담(8.24)에서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북한과 입장 조율

-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제재·압력·고립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조속히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주요 국가들이 가능한 한 빨리 실질적인 핵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재하려는 시도라고 판단됨.

라. 남북관계 및 양자대화에 대한 입장

-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음.
- 아울러 러시아는 리·북대화 및 리·북관계 증진을 통해 북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함.
- 또한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같은 3자협력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을 도모하는 실리를 취하는 한편, 러시아를 중재자로 하여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택하고 있음.

<표 IV-1> 6자회담 관련국의 입장 비교

	당면목표	사전조치 이행 여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	양자대화
북한	미·북관계개선 및 평화협정 체결	조건 없이 6자회담 선(先) 재개	남북 회담의 형식적 수용	미·북대화 초점, 중·북협력, 러·북협력 활용
미국	6자회담 틀 유지 및 상황 관리(비확산에 초점)	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비롯한 모든 핵활동 중단, ②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③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등 선(先) 사전조치이행, 후(後) 6자회담 재개	남북관계 개선의 선행 필요성 인정	미·북대화 활용
중국	6자회담 조기 재개 및 상황 관리	6자회담 재개 필요성 적극 주장, 선 사전조치 이행에는 부정적 시각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인정	중·북협력 하, 한·중, 미·중대화 통해 6자회담 재개 유도 미·북대화 필요성 주장
일본	6자회담 틀 유지 및 현재 상황 관리	미국의 입장과 동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인정	6자회담 재개 후 일·북대화 모색
러시아	6자회담 틀 유지 및 상황 관리	6자회담 재개 사전조치에 대한 미국과 북한 입장의 조정 시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인정	러·북협력 활용, 남·북·러 3자대화 도모

I
II
III
IV
V
VI

V. 6자회담 경로 및 전망

1. 6자회담 전개경로

- 1993년 북핵문제가 발생한 후, 미국과 북한은 상호 협상카드와 압박카드를 가지고 힘겨운 싸움을 지속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상카드가 다원화되고 협상양식이 복잡하게 변했지만 미국과 북한의 기본입장이 대립하는 구조는 지속
 - 북핵문제는 교착상태 → 위기고조 → 대화재개 → 부분타협의 양상을 주기적으로 반복¹²
 - 북핵협상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거부, NPT 탈퇴, IAEA 사찰관 추방, 재처리시설 재가동, 폐연료봉 추출 등으로 위기가 조성된 이후 탐색전을 거쳐 협상이 모색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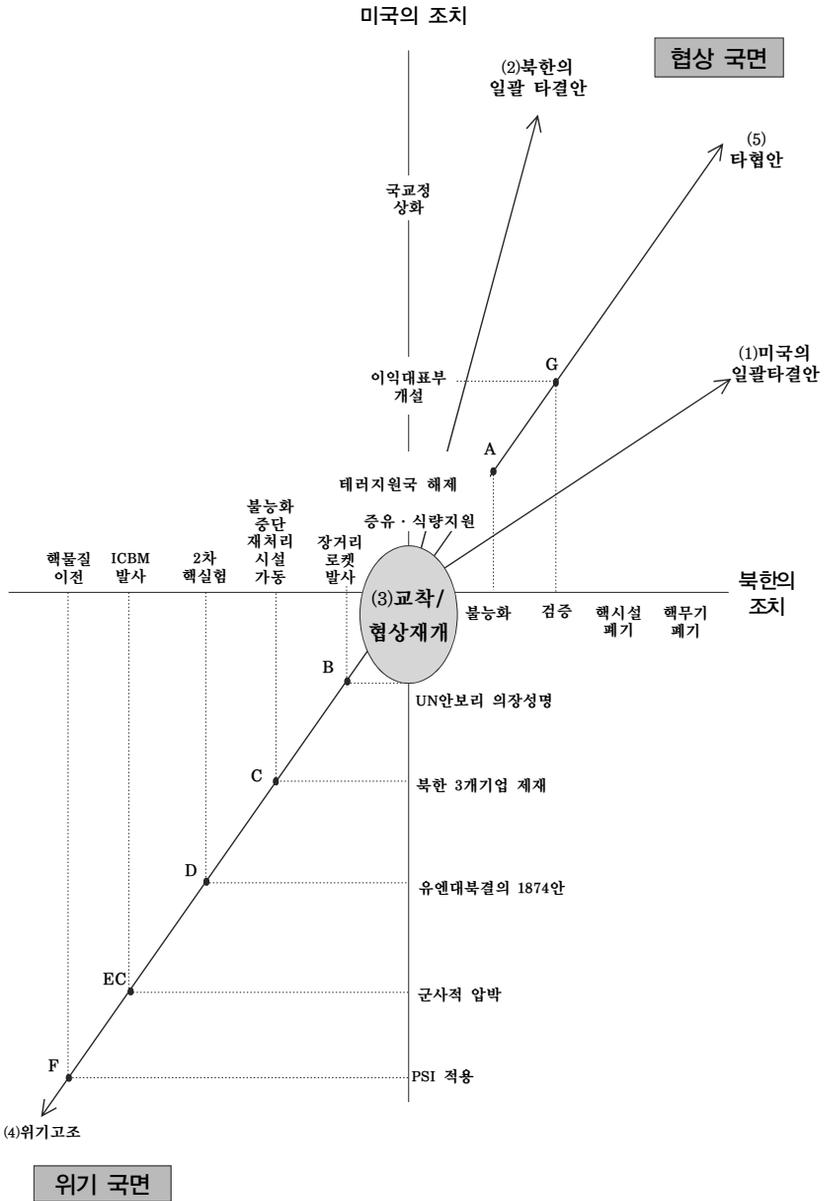
-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의혹이 대두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함.
 - 이에 미국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제네바합의를 폐기함으로써 제네바합의 체제는 붕괴
 - 이후 2003년 8월 6자회담이 개시되었으나 초기에는 별로 진전이 없었고,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당시 정세상태에 있던 6자회담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채택

- <그림 V-1>에서 「9·19 공동성명」 채택 후 긴장고조와 6자회담 중단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음.

¹² 한 연구에 따르면 1984년 3월 이후 미국이 북한의 도발 후 다시 관계를 맺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5.4개월이라고 한다. Victor D. Cha, “Returning to the Dance Floor North Korea: Why Now?,” CSIS (July 25, 2011).

- 『9·19 공동성명』과 후속합의문은 (1)미국의 일괄타결안(선 비핵화, 후 관계정상화)과 (2) 북한의 일괄타결안(선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이 절충된 것으로, 테러지원국 해제와 불능화가 조응한 A에서 타협안 마련
- 그러나 『9·19 공동성명』 채택 직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 금융제재 사건과 북한의 ‘선 경수로제공’ 주장 등으로 인해 그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교착상태(3)에 봉착
- 이후 북한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상호 대응조치를 번갈아 취하면서 북핵문제는 <그림 V-1>의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왕복
-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 B, 북한의 불능화 중단 및 재처리시설 가동에 대해 북한 3개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가 발표된 C, 그리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대북결의안 1874호가 채택된 D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전개

<그림 V-1> 북핵문제의 전개 경로



- 기존의 6자회담 목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에 있었으며, 단기적으로는 북핵 불능화를 완성하고 중기적으로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확대 및 6자회담 거부를 천명함에 따라, 6자회담의 협상목표에 차질이 발생
 - 현재 6자회담 재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 북한 핵활동 중단, 핵물질 및 핵기술의 확산 저지 등이 우선과제로 대두

-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핵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그림 V-1>을 통해 전망하고자 함.
 -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그림 V-1>의 협상국면인 1사분면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 존재
 - 협상국면으로 다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복잡한 환경에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미·북 간 상호불신이 심화되고 협상의제가 다원화된 환경에서 협상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 기대 난망

- 그리고 협상국면에서 어느 지점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 즉 2008년 12월 협상이 중단되었던 A점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도 쟁점이 될 여지 존재

2. 예상 시나리오

- 6자회담 재개 시 가능한 시나리오는 대타협, 결렬, 회담 틀 유지의 3가지임.

가. 대타협

- 6자회담을 통한 대타협은 우선 2005년 타결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선결 조건임.
 - 공동성명에서 참가국들은 평화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북핵 위기의 해법으로 분명하게 제시했고, 북한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
- 『9·19 공동성명』은 또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동북아의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고, 이와는 별도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하기로 함.
 - 북한의 핵동결조치 이행, IAEA 사찰 재개 필요
 - 또한 새로 개발된 우리농축촉프로그램(UEP)도 논의 필요
 - 아울러 북한의 이행조치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미국이 대북지원 등 병행
- 그러나 이러한 대타협은 핵동결조치 이행의 어려움, 우리농축촉프로그램(UEP) 중단에 대한 북한의 반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됨.

I

II

III

IV

V

VI

나. 결렬

-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핵동결조치를 이행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될 수 있음.
 -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장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의 입장을 내세우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
 - 반면 미국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북한의 조치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

-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6자회담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결렬되는 시나리오임.
 - 이럴 경우, 북한이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긴장고조 조치를 취할 여지 존재
 - 그러나 중국의 조정 역할, 북한과 미국의 상호 대화 필요성 인정 등을 고려할 때 6자회담이 결렬되고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저조

다. 회담 틀 유지와 상황관리

- 3차 남북 핵회담과 미·북회담이 개최된 후 내년 초 6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
 - 6자회담 개최의 3가지 사전조치(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활동 중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모라토리엄)에 대한 타협안 도출

- 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불확실, 관련국의 선거 일정 등으로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보다 회담 틀 유지에 의한 위기관리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농후함.
 - 『9·19 공동성명』의 복원에 의해 북핵활동의 동결, 3차 핵실험 방지 등 위기관리에 초점
 -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중단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

-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타협이나 회담 결렬 없이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황 관리나 개선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함.
 - 상황관리에 주력하는 경우,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할 수 있고, 중국도 6자회담을 통해 상황관리 도모
 - 아울러 북한은 6자회담 재개로 유엔의 제재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미국의 대북지원 확보, 한국의 지원 확보 등의 명분 확보 가능

-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선언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정부 교체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상황관리와 위기고조 방지차원에서 6자회담이 상황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가 장기화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북한문제보다 자국의 경제위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추동력의 약화로 6자회담을 통한 상황관리가 우선시될 수 있음.

-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중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핵협상은 한국, 미국 등에 신 정부가 출범한 후 2013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I
II
III
IV
V
VI

VI. 우리의 대책

1. 6자회담 대책

- 우선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 핵문제 협상에서 한국은 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촉진자 역할 수행
- 첫째,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핵폐기의 원칙 위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전망이 필요함.
 -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협력과 지지 획득
- 둘째,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우리의 전략에 입각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함.
 - 6자회담의 의제와 이행방안, 합의문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우리의 입지를 확보
- 그동안 북핵문제에 대한 부분적·단계적 접근으로 인한 타협과 파행의 패턴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제네바 합의는 경수로 건설비용과 중유만 소진한 채 폐기
 - 「9·19 공동성명」(2005)의 비핵화 원칙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후속합의 이행 실패로 실효성 상실
 - 「2·13 합의」(2007)는 대북 중유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시설 복구로 이행 중단
 - 대북지원은 비가역적인 반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가역적인 결과 발생

I

II

III

IV

V

VI

- 그랜드 바겐에 입각하여 북핵폐기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북한체제 보장, 대북경제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관련국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핵폐기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하되, 구체적 이행은 비핵화 초기조치, 비핵화 기반조성, 비핵화 심화, 비핵화 완성의 4단계로 구분하여 이행방안 마련
 -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상응하여 6자회담의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프로세스를 연계
 - 특히, 남북관계 프로세스는 비핵·개방·300구상, 그랜드 바겐, 한반도 신평화구상의 실행계획으로 구성¹³

- 한편,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될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핵안보 정상회의의 우선 과제는 워싱턴에서 개최된 1차 회의의 합의 및 공약사항의 이행 점검
 - 그러나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북핵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북핵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외 개별발언을 통해 제기될 수 있으며, 정상회의장 밖 또는 기자회견장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이 가능

¹³- 박종철 외, 『한반도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1) 참조

<표 VI-1>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

비핵화 단계	6자회담 프로세스: 관계개선, 경제지원,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프로세스: 비핵·개방·3000, 그랜드바겐 구상, 한반도 신평화구상
1단계: 비핵화 초기조치 -핵활동 동결; 핵시설 폐쇄; 신고(Pu, UEP) -핵실험·미사일시험발사 모라토리움 -IAEA사찰단 복귀 -비핵화원칙 재확인 ※ 한·미 정부, 6자회담 재개 ‘사전조치’	-미·북, 일·북대화 재개; 수교협상 개시 -에너지지원 (중유 100만t) 재개 -동북아안보협력 협의	-남북(군사)대화 재개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경협 확대; 식량지원 재개 -‘3000 구상’ 실현 위한 협의 및 시범사업
2단계: 비핵화 기반조성 -사찰검증 -핵시설 폐기개시	-대북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원 협의 -동북아안보협력기구 설치 협의 -미·북 연락사무소 개소 -평화체제 위한 4자 평화포럼 가동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인도지원 전면제공 -북한개발자금 (\$400억) 조성: 개발 프로젝트 본격화 -서해평화경제협력지구 협의 -남북연계 인프라 건설 -남북 군사신뢰구축, 군비통제 협의
3단계: 비핵화 심화 -핵시설 폐기 완료 -핵무기 폐기 개시 -핵물질 이전 개시 -NPT 잠정 복귀	-동북아 안보협력체 창설 -국제금융기구 잠정 가입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남북군비통제 추진 -남북원자력협력기구 설치
4단계: 비핵화 완성 -핵무기 폐기 완료 -핵물질 이전 완료 -NPT 완전 복귀	-미·북 수교, 일·북 수교	-남북군비통제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국제적 보장

I
II
III
IV
V
VI

- 6자회담 재개 시 우려되는 구도는 한·미·일 대 중·러·북 구도로 대립양상이 고착되는 양상인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에 대한 중, 러의 지지 확보
 - 특히,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가동 등을 통한 중국의 지지 확보

2. 남북관계 대책

가. 기본방향: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유연성 발휘

■ 원칙의 유지

-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기초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고 국민적 지지 확대를 도모함.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및 다자차원의 노력을 경주함.
 - 남북핵회담 또는 6자회담 개최 시 6자회담 내에서의 남북핵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력 확보
-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을 도모함.
- 한·미동맹 및 우리의 군사력에 의한 대북억지력 확보에 의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음으로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함.

- 대북지원 및 경협조치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함.

■ 대북정책의 유연성 발휘

-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및 국내 선거에서 남남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남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 평화관리에 주안점을 둬.
 - 위기관리 및 우호적 환경조성을 위해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 확대
 - 북한이 내년 상반기 경축행사를 위해 식량지원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활용
- 6자회담 재개, 남북대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함.
 - 6자회담 재개, 남북대화 등에 따른 5·24 조치의 단계적 완화
- 남북관계 개선의 로드맵을 작성함.
 - 인도적 지원의 확대,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로 관계 개선의 여건 조성
 -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에 의해 남북관계의 복원

나. 세부대책

■ 인도적 지원의 확대

- 정부 차원의 인도지원은 북한이 국제기준에 준하는 분배감시활동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직접지원을 추진하며, 북한이 반대할 경우 감시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함.

-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민간단체의 지원한도 상향조정 등 인도지원 활동을 장려함.
- 정부차원의 지원은 대규모 일회성 지원보다는 소규모 다회성 지원 방식으로 지원함.
 - 북한의 긍정적 태도변화와 연동하여 지원규모와 품목을 조정
-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은 평양시민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주민에게 고르게 분배되도록 지역지정 기탁 방식으로 추진함.

■ 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

-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은 5·24 대북조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남북관계 개선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체육 및 학술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함.
 - 남북 축구대회 개최,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 공동추진 등

■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

- 남북관계의 복잡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관급 회담을 개최함.
 - 천안함·연평도 도발사건과 관련 북측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수용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통한 재발방지방안 논의
 -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재개 등에 관해 논의

-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이후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에 대해 협의함.
 - 적십자회담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상봉 및 납북자·국군포로, 신숙자씨 모녀사건 등 문제 해결에 역점

-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은 사과, 재발방지, 신변보호의 조건 가운데 신변보호에 역점을 두고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함.

■ 통일준비 노력 지속

- 통일담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함.
 - 국민 눈높이에 맞게 통일비전 및 통일미래상 제시

-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통일계정을 설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통일계정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금 및 민간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강구

- 통일 대비 행정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함.
 - 통일 대비 인력 양성을 위한 통일교육 기관 설립

I
II
III
IV
V
VI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종철 외.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손기웅. 『동서독 간 정치범 석방 거래(Freikauf)』.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여인곤 외.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조명철 외. 『비핵·개방·3000구상: 남북경제공동체형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2. 논문

- 이봉조. “ARF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안보현안분석』. Vol. 61.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1.7.29.
- 이인호.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4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 Klingner, Bruce. “Talks about Talking Okay, but the Ball is in Pyongyang’s Court.” *The Heritage Foundation WebMemo*. July 26, 2011.
- Siegfried S., Hecker. “What I Found in North Korea: Pyongyang’s Plutonium Is No Longer the only Problem.” *Foreign Affairs*. December 9, 2010.
- Cha, Victor D. “Returning to the Dance Floor North Korea: Why Now?.” *CSIS*, July 25, 2011.

3. 기타자료

WFP, FAO & 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ch 24, 2011.

FAO. *GIEWS(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Flood Update. August 8, 2011.

『경향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Radio of Free Asia.

부록
북핵관련 주요 일지

I. 제1차~제6차 6자회담(2003년~2008년) 일지

1. 2003년

일 시	내 용
3.8~9	중국 첸지첸(錢其琛) 부총리 방북해 3자(미·중·북) 회담 개최 제의
4.12	북한 외무성 담화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 (다자회담 수용 시사)
4.13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반응 - 북한의 다자간 대화 수용에 “북한에서 좋은 진전”
4.23	미·중·북, 북핵 3자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 북한, 일괄타결 제의
4.30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상 7개국
5.14	한미 정상회담 개최(미국 워싱턴 D.C.) - 공동성명에서 “북핵은 다자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제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 검토”
5.24	북한 외무성 담화 - 먼저 미·북 간 회담 후 미국이 제기하는 다자회담도 할 수 있음을 피력
5.27	파월 미국 국무장관의 반응 - 북한의 양자회담 제의 거부
5.31	부시 대통령,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추진 선언 (폴란드)
6.12~13	한·미·일 대북정책그룹(TCOG) 회의(하와이)

일 시	내 용
6.18	북한 외무성 담화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조선신보)
6.30	북한, 재처리 플루토늄의 무기화 언급
7.3	UN 안보리, ‘북핵 폐기 촉구’ 의장성명 -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
7.12~15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 북한에 다자회담 수용 설득 - 북한, 수용불가 표명
7.14	KEDO 이사국 실무자 회의(미국 뉴욕)
7.21	미국 의회, KEDO 지원 금지법 통과
7.23~25	북한, 다자회담 수용 의사를 한·미·일·중·러에 통보
7.28~ 8.1	볼튼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중·방한 - 북핵 대응 3궤도(다자간 회담, UN 안보리, PSI)구상 언급 (29일)
8.1	북한 외무성 담화 - 외무성 대변인, 북한 6자회담 참가 용의(조선신보)
8.4	북한 외무성, 6자회담 개최 발표 - 6자회담 틀 내 조·미 쌍무회담 제안
8.7~8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제1부부장 방북 - 6자회담 일정 합의
8.12	한·러·북, 6자회담 관련 고위급 회담(러시아 모스크바)
8.13~14	한·미·일, 6자회담 관련 3자 협의(미국 워싱턴 D.C.)

일 시	내 용
8.27~29	제1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 북한, 미국의 외교 관계 인정 및 안전보장, 사찰 전 경제 지원 등을 요구하며 핵실험 압박
10.2	북한 외무성 담화, 연료봉 8000개 재처리 완료 발표 - 북한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미 적대정책에 대한 정책으로 핵 억제력 강화 노력”
10.7	북한 외무성 담화 - 일본의 납치자 문제제기를 이유로 핵문제 회담에서 일본 제외 주장(조선중앙통신 보도)
10.29~31	우방귀(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본 포함한’ 6자회담 재개에 원칙적으로 동의 -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동시 행동의 원칙 하에서만 6자회담 참가할 것” 보도
10.30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 발표 - ‘동시성(simultaneity)’은 국무부에서 사용하지 않아온 용어라며 안전보장 이전 핵무기 프로그램의 先폐기 거듭 주장
11.19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 제2차 6자회담 협의차 방한
12.9	북한 외무성 담화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제2차 6자회담 기본입장 발표 - “일괄타결 동시행동 원칙 재차 주장”

2. 2004년

일 시	내 용
1.8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미국 신임 북한 특사, 박길연 UN대표부 대사와 면담 중 6자회담 재개 필요성 강조

일 시	내 용
1.17~20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대외연락부장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 “차기 6자회담 개최 동의, 미국의 입장 확인 필요”
1.23	미·북 양자(디트라니-박길연) 접촉(미국 뉴욕) - 2월초 6자회담 개최, - 회담 시 미·북 직접 협상 참가 용의
2.24	제2차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담(중국 베이징)
2.25~28	제2차 6자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 의장성명서 채택(28일) - 핵문제의 CVID 방식에 따른 평화적 해결 동의 표명(북한 제외) - 한국: 3단계 북핵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북이 완전한 핵폐기의 초기 단계로 모든 핵프로그램의 동결을 완료한다면 에너지 지원에 나설 것 제안 - 북한: UEP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된 파키스탄과의 연루 의혹 부인
4.7~8	한·미·일 3자 협의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재확인
6.21~22	제3차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중국 베이징)
6.23~26	제3차 6자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 참가국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필요성 동의 - 미국: 미국의 안정보장과 한·중·일 3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지원의 대가로, 3개월 간의 전면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동결과 후속으로 완전한 핵 철폐를 요구 - 북한: 동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동결에 상응하는 조치들(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경제제재 철폐, 에너지 지원 개시 등)을 요구

3. 2005년

일 시	내 용
2.10~14	<p>북한, 핵무기 보유 공식 발표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 (외무성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 한국: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언급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에 급파, 덕 체니(Richard Brace Cheney) 미 부통령과 협의 미국: “북한 고립 심화될 뿐” 북한: 한성렬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미·북 직접 대화 해야” 중국: “북핵 관련 대북한 압력·제재 반대 입장” 일본: “새로운 것 아니다” 미국-중국: 라이스 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전화통화로 북핵 의견 교환(12일) 한국-미국: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핵 3대 정책 합의(14일) ①북 회담 복귀 압박, ②대 북한 추가 보상 금지, ③북 핵물질 반출 경계
2.19~22	<p>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 “6자회담 조건되면 회담 탁(卓)에 나갈 것” - 미·일 외교·국방장관, ‘2+2회담’ 공동 기자 회견에서 “북핵 해결 안되면 유엔 안보리에 상정”
3.2	<p>북한 외무성, 조건 충족시 6자회담 참가 메모랜덤 공개(2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2일~4일)
3.16	<p>북한 외무성, 라이스 장관의 폭정 발언 맹비난</p>
3.18~21	<p>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동북아 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주권국가’로 지칭 - 방일(3.18~19), 방한(3.19~20), 방중(3.20~21)

일 시	내 용
3.22~27	박봉주 정무원 총리 방중 - 회담 중지도 투쟁이지만 회담 참가도 투쟁이라며 우회적으로 대화 참가 의지 피력
3.31	북한 외무성 담화 -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 된 이상 6자회담은 이제 근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4.25	북한 외무성 담화 - UN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 엄포 -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 방중, 6자회담 전 미·북 양자협상 강조
4.29~30	부시 미국 대통령, 김정일에 폭군(tyrant) 지칭(29일) - 북한: “부시는 불망나니에 도덕적 미숙아”(30일)
5.6	한국-일본, 한국-중국 연쇄 북핵 회담 - “6자회담 외교노력 계속”
5.8	한·중 정상회담, “북한 핵에 깊은 우려”
5.9	한·러 정상회담, “6자회담 위해 더 노력” 미·러 정상회담, “북핵 6자회담에서 해결”
5.11	북한 외무성 담화 - “영변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연료봉 8,000개 인출 작업 완료” - 한국: “폐연료봉 인출은 협상용”
5.13	미국-북한, 실무접촉(미국 뉴욕) - 미국, “북한은 주권국가이며 침공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며, 6자회담 재개 시 양자협정도 수용 가능 피력”
6.14~17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북한 평양) - 정동영 장관: “200만kW 전력공급 제의(7.12 발표)” - 김정일 위원장: “미국에서 북한 인정·존중 확고할 경우 내달 6자회담 복귀 용의,”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효” - 미국: “날짜 정하기 전까지 6자회담은 없는 셈”

일 시	내 용
7.26~8.7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개최(중국 베이징)
8.29	북한 외무성 담화 - 9월 셋째 주에 6자회담 2단계 회담 갖자 발표
9.13~19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중국 베이징) - 미국: “핵 프로그램 폐기” - 북한: “핵무기만 포기” - 결론: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채택 NPT·IAEA 안전조치 복귀,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 중국 베이징) 발표 ①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일 시	내 용
9.13~19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p> <p>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p> <p>②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p> <p>③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p> <p>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p> <p>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kW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p> <p>④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p>

일 시	내 용
9.13~19	<p>⑤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p> <p>⑥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 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p>
11.9~11	<p>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개최(중국 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9 공동성명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채택 - 북한: 미국의 마카오 은행에 대한 대북거래 금지 조치 반발(10일) - 미국-북한, ‘금융제재’ 양자 협의 갖기로 합의

4. 2006년

일 시	내 용
1.18	<p>미·북·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중국 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先 금융해제 요구” - 미국: “기존 입장 고수”
6.1	<p>북한 외무성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대 정책 지속 시 초강경 대응 불가피 - 힐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및 차관보 초청(7일, 미국 거부)
7.5	<p>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북한 함경북도 무수단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벽 6발 발사, 12시간 후 1발 추가발사: 대포동 2호 7분간 비행 후 공중폭발 - 이 날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독립기념일(미국 현지 7.4) - 북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차원의 군사훈련으로 6자회담과는 무관”

일 시	내 용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대북 강경론 입지 강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것” - 미국: “UN 안보리 긴급 소집” - 일본: “도발 행위, 평양 선언 위배,” 북한 화물선(만경봉 92호) 입항 금지
7.16	UN, 안보리 결의 1695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즉각 거부
9.9	중국 포함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9.13	미국, UN 전 회원국에 초강경 대북제재 조치 동참 공문
9.14	한·미 정상회담 개최(미국 워싱턴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재개 및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 합의
9.17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비동맹운동(NAM: Non-Aligned Movement) 정상회의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미국이 대북한 제재를 계속하는 한 6자회담 복귀 없다” 언급
9.19	일본·호주, 대북 경제제재 조치 발표
9.21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나타낼 경우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고려”
9.26	북한과 미국의 엇갈린 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 “북한 6자회담 복귀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내달 아시아 순방” - 최수현 북한 외무성 부상, UN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제재 해제 없이는 6자회담 복귀 불가”
9.29	천영우-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개최(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접근 방안’ 협의

일 시	내 용
10.3	<p>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핵실험 실시 방침”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제재 압력에 자위적 차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 - 한국: “여·야, 핵실험 중단 촉구” - 미국: “북한 핵실험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 일본: “북한 핵실험 용서 못해”
10.6	<p>UN 안보리 의장성명서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실험 발표에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10.8	<p>중·일 정상회담, 베이징에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재개 추진 -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실현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다짐
10.9	<p>북한, 1차 지하 핵실험 실시(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5 AM,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진도 3.58~3.7의 지진과 포착 - 북한 조선중앙통신: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지하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 한국: 노무현 대통령, “핵실험은 불장난, 포용정책 주장하기 어렵다” - 미국: ① 미국은 절제되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 ② 국제사회의 평화의 파트너들과 협의하되,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함 ③ 미국은 UN의 협조가 중요하고 현재 UN에서의 논의를 지지(부시 대통령) - 중국: 북한이 제멋대로 핵실험 <p>한·일 정상회담 개최(한국 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실험에 공동 대응

일 시	내 용
10.14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채택 - UN 안보리 현장 7조 원용한 강력한 제재안 결의
10.19	탕자쉬안 중국 특사, 김정일 면담 -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메시지 전달
10.31	미·북·중, 제1차 베이징 3자 회동 - 힐·우다웨이·김계관 6자회담 재개 합의 - 라이스 장관, “6자회담 재개 시 5MWe 원자로나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해체, IAEA 사찰단 활동 등 요구할 것”
11.27	한·미·중·일 4개국 6자회담 대표 연쇄 접촉 개최(중국 베이징) - 6자회담 재개 문제 논의
11.28~29	미·북·중 제2차 3자 회동(중국 베이징) - 미·북 수석대표 회담, 접점 못찾음 - 미국, 북한에 조기 성과(Early Harvest) 제의
12.18~22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 - 한국: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 - 미국: 인내의 한계를 초과했다. 행동이 필요할 때 - 일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일본의 안보와 지역사회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며 일북 평양선언 및 공동성명을 위반한 행위 - 북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제재 해제가 선결 - 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성과 기대 - 러시아: 6자회담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관계 정상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상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
12.20	미국, 북한에 ‘핵폐기-상응조치’ 수정안 제시 - 북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문제 선결원칙 고수
12.22	제5차 6자회담 회의 차기 일정 못잡고 휴회(사실상 종료)

5. 2007년

일 시	내 용
1.16~18	김계관 외무성 부상-힐 차관보 양자회담 개최(독일 베를린) - BDA 문제 합의
2.8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개최(중국 베이징 다포우타이(釣魚臺)) - 적대 정책 지속 시 초강경 대응 불가피 - 힐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및 차관보 초청(7일, 미국 거부)
2.12	미국, 북한 계좌 1,100만 달러 해제 통보
2.13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2·13 합의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일 간의 단계별 핵불능화 이행(Phased Implementation)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Phase I) 북한,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의 중지(shutdown) 미국, 중유지원개시(initial shipment) - 2단계(Phase II) 북한, 금년 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complete and correct) 신고 완료, 테러지원국(S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적용 종료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에 따른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탄두 해체 문제 등의 사항은 불능화 완료 및 북한의 신고(Declaration)가 접수된 후인 3단계(Phase III) 과정에서 차후 협의 ○ 북한 내 ①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②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일 이내 중유 5만t 상당 긴급에너지 대북 지원

일 시	내 용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일·북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60일 이내) ○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다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및 IAEA 사찰단 복귀 수용 ②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기간 중 중수 100만t(초기 5만t 포함) 상당의 지원 제공 ○ 6자회담 내 5개 실무그룹(WG) 구성(30일 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이후, 6자 장관급회담 개최 ○ 직접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3.19	<p>힐-대니얼 글레이저(Daniel Glaser), 미 정부의 BDA 자금 해결 원칙을 담은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사용”
3.19~22	<p>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개최(중국 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DA 자금 미입금으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북한으로 귀국, 우다웨이 부부장 휴회 선언(22일)
6.25	<p>러 극동사업은행, BDA 자금(2,400만 달러)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좌로 입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북한 계좌로 BDA 동결자금 송금 확인 - 조선중앙통신, 동결 자금 해제 과정이 진척되고 있으므로 IAEA 실무단 초청 보도
6.26~30	<p>IAEA 실무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의 폐쇄·검증 문제 등 협의

일 시	내 용
7.6	북한 외무성 답화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중유 5만t 첫 선박 입항과 맞추어 핵시설 가동 중지 준비 개시할 것”
7.14	한국 중유 제공, 선봉항 도착(총 5만t 중 1차분)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중유 5만t의 첫 배분이 도착한 14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인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였다”(15일)
7.18	북한 외무성 답화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영변 원자로 폐쇄 공식 발표 - IAEA, 영변 5개(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 공장,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핵시설 폐쇄 확인
7.18~20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중국 베이징) - 9월 초 제6차 2단계 회의 개최, 장관급 회의 개최 합의
8.2	한국, 대북 중유 5만t 공급 완료
8.7~8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개최(한국 판문점)
8.8	미 국가정보국 기밀해제 보고서 -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는 데에 ‘높은 확신(high confidence)’ 표명
8.16~17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중국 선양) - 북한, 불능화 핵시설 대상에 영변 50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거론
8.20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모스크바에서 개최
9.1~2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개최(스위스 제네바) -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 합의

일 시	내 용
9.11 ~15	미·중·러, ‘북핵 불능화 기술팀’ 방북
9.12	뉴욕타임즈,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 제기 - 북한 외무성,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18일)
9.23	중국, 대북 중유 5만t 중 2차분 공급 완료
9.26	미국 국무부, 미사일 거래에 연루된 북한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 제재 조치 부과 결정 발표
9.27 ~ 10.3	<p>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중국 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 합의의 2번째 단계 이행을 위한 조치들(Second-Phase Actions) 합의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미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WG에서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미측 공약 이행할 것이며, 일·북 또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 중유 100만t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재확인 <p>‘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0·3 합의) 합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 첫 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 ②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일 시	내 용
9.27 ~ 10.3	③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타국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함. ④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함. ⑤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t 중유 포함)이 북한에 제공될 것
10.2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개최 - “핵문제 해결 위해 9·19 공동성명, 2·13 합의 이행 노력” 명시
12.3~5	힐 차관보 방북 - 힐, 제2단계 조치 이행에 대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친서 전달
12.31	북한, 전면 핵신고 기한 미준수 - 북한, 영변 불능화 작업인원 감축 통보

6. 2008년

일 시	내 용
2.19	김계관 외무성 부상-힐 차관보 회동(중국 베이징) - 북핵 신고에 대해 논의
2.21	천영우 본부장-김계관 부상 회동(중국 베이징)
3.26	김태영 합참의장, 국회 질의에서의 답변 -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북한의 핵공격시 대처방문 질문) 답변
3.28	북한, 서해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김태영 합참의장 답변에 대한 반발 표시) -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NLL수역 남북충돌 경고 -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기존의 핵 불능화 조치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

일 시	내 용
3.28	북한 외무성 답화 - 북한 외무성 대변인, HEU 프로그램 보유 및 시리아와 핵협력 의혹 부인
4.8	힐 차관보-김계관 부상 회동(싱가포르) - 양자 간 핵 신고서 내용 잠정 합의 - 미·북 비공개 양해서 채택
5.8~10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 북한, 성 김 과장에게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18,000 page분량 핵시설 운영자료 전달) - 미국, 대북 50만t 식량 제공 공식 발표
6.26	북한,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핵 신고서(Declaration) 제출 - 내용: 약 26kg의 플루토늄을 핵무기용으로 재처리, 사용 후 연료봉 가운데 7~8kg의 미추출 플루토늄 보유 - 미국: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 착수
6.27	북한, 영변 5MWe원자로 냉각탑 폭파
7.10~12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7·12 합의, 중국 베이징) ① 한반도 비핵화 검증체제 수립 ② 6자회담 틀 내에 감시체제 수립 ③ 핵 포기와 경제지원 위한 시간계획 작성 ④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⑤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 개최
7.23	6자 외교장관 회담 비공식으로 개최(싱가포르)
8.11	미국, 대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보류조치 - 미국, 북한이 북한 내에서의 검증 체계에 동의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겠다고며 보류조치를 발표
8.11~13	6자회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개최(중국 선양)
8.14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성 김 미국 대북특사 방중 - 북한, 미국 측이 과도한 검증을 요구한다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26일 발표)

일 시	내 용
8.18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 조선중앙통신, 테러지원국 명단 미삭제는 ‘행동 대 행동’ 원칙 위반
8.22	미·북, 양자 회담 개최(미국 뉴욕) - 북핵 검증체계 관련 회동
8.26	북한 외무성 답화 - 북한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연기가 『10·3합의』 위반이라며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 발표 - 한국: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유감스러운 조치” - 미국: 데이너 페리노(Dana Perino) 백악관 대변인,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 미충족 - 중국: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 “6자회담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
9.3	북한, 영변 핵시설 복구작업 개시
9.19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협의 개최(한국 판문점) -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복구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같다”
9.22	북한, 영변 핵 봉인 제거 요청(재가동 위협)
10.1	힐 차관보 일행 방북 - 핵 검증 원칙 논의 - 핵 검증 방식 ‘구두(verbal) 합의’(3일) * 후일 북한은 현장 시료채취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번복
10.7	북한, 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10.11	미국 국무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현지시간 자정) ○ 합의 내용 -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일 시	내 용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검증에 중요한 자문과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 한다. -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 검증체계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한 프로그램, 모든 유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된다.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유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10.12	북한, 핵 불능화 작업 재개
10.13	북한, IAEA 검증단 핵시설 접근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시설 불능화 재개(연료봉 제거)
11.7	리근 미국국장 방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검증·핵불능화·에너지 지원 문제 뉴욕에서 협의 - 미·북 간 샘플링 문제 협의 - 힐,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서로 완전히 이해”
11.12	북한 외무성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신고 검증 위한 시료채취 거부입장 천명 -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
11.15	조선신보, 시료채취는 불능화 이후 논의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력화(불능화) 단계는 핵시설 폐기 과정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으며 핵무기 문제의 논의는 조선이 현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의 의제”
12.4~5	미국·북한 6자 수석대표 양자 회동(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 의정서 문제 협의, 진전 없음 - “문서 표현에 견해차”
12.8~11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 회의 개최(중국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된 검증방식 도출 실패 - 성과 없이 휴회

II. 6자회담 중단 이후(2009년~2011년 현재) 일지

1. 2009년

일 시	내 용
4.5	북한, 장거리 로켓(광명성 2호) 발사 -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핵무기 없는 세계’ 연설 중, “북한이 다시 한번 규칙을 위반했다”(프라하)
4.13	UN 안보리,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의장성명 채택 - 한국: 적절한 조치 -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6자회담 불참, 기존 합의 파기, 핵 시설 불능화 원상복구” 선언
4.16	북한, 영변 주재 IAEA 감시요원 추방
4.17~19	한국, PSI 전면 참여 가능성 시사(17일)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PSI는 선전포고”(18일) - 한국 국방부, “PSI 전면참여 발표 연기”(19일)
4.29	북한 외무성 성명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북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계속할 것이며, 경수로 발전소 연료를 자체 해결(즉, 우라늄 고농축 시사)할 것”임을 시사
5.25	북한, 제2차 지하핵실험 실시(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5.26	한국, PSI 전면 참여 선언 북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
5.27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 “북남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전쟁위험 계선을 넘어서게 됐다”

일 시	내 용																
6.12	<p>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Resolution 1874) 단장일치 채택</p> <p>○ 결의 1718호와 1874호 비교</p> <table border="1" data-bbox="303 399 929 1046"> <thead> <tr> <th></th> <th>결의 1718호(2006.10.14)</th> <th>결의 1874호(2009.6.12)</th> </tr> </thead> <tbody> <tr> <td>규탄수위</td> <td>·규탄한다</td> <td>·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td> </tr> <tr> <td>화물검색</td> <td>·금지물품(금수무기, WMD, 미사일) 적재한 화물검색</td> <td>·공해상 의심선박 ·금지품목 발견시 압류 및 처분</td> </tr> <tr> <td>수출통제</td> <td>·무기류, 미사일, WMD, 사치품, 관련 기술훈련 및 서비스</td> <td>모든 무기 관련 물자</td> </tr> <tr> <td>금융제재</td> <td>·WMD·미사일 관련 개인·단체의 자원 동결</td> <td>·WMD·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및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무상원조·금융 지원·양허성 차관의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td> </tr> </tbody> </table>			결의 1718호(2006.10.14)	결의 1874호(2009.6.12)	규탄수위	·규탄한다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화물검색	·금지물품(금수무기, WMD, 미사일) 적재한 화물검색	·공해상 의심선박 ·금지품목 발견시 압류 및 처분	수출통제	·무기류, 미사일, WMD, 사치품, 관련 기술훈련 및 서비스	모든 무기 관련 물자	금융제재	·WMD·미사일 관련 개인·단체의 자원 동결	·WMD·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및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무상원조·금융 지원·양허성 차관의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결의 1718호(2006.10.14)	결의 1874호(2009.6.12)															
규탄수위	·규탄한다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화물검색	·금지물품(금수무기, WMD, 미사일) 적재한 화물검색	·공해상 의심선박 ·금지품목 발견시 압류 및 처분															
수출통제	·무기류, 미사일, WMD, 사치품, 관련 기술훈련 및 서비스	모든 무기 관련 물자															
금융제재	·WMD·미사일 관련 개인·단체의 자원 동결	·WMD·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및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무상원조·금융 지원·양허성 차관의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6.13	<p>북한 외무성 성명</p> <p>-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미 전면대결 시작,' '플루토늄 무기화·우라늄농축 작업 착수·군사적 대응' 등 안보리 결의 1874호 비난 및 우라늄 농축 착수 위협</p>																
9.3	<p>UN 주재 북한 상임대표, UN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 전달</p> <p>-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며 우라늄 농축시험 성공 주장</p>																

일 시	내 용
9.15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미·북 양자회담 가능성 시사 - 힐러리,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6자회담의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
9.21	이명박 대통령,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 -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KS), 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오찬(뉴욕),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

2. 2010년

일 시	내 용
3.26	북한, 천안함 침몰 -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해군 1200t급 초계함 천안함 침몰
5.12	로동신문, 북한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 성공 주장
10.8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발표 - 연구소, “북한 HEU 개발 실험실 단계 넘었다” 주장
11.17	잭 프리처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방북 - 잭 소장, “북한이 2012년 목표로 영변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 추진 중” 전언
11.21	북한 외무성 성명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북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계속할 것이며, 경수로 발전소 연료를 자체 해결(즉 우라늄 고농축 시사)할 것”임을 시사
11.23	북한, 연평도 남측 군부대·민간인 거주지역 무차별 포격 도발
11.28	중국, 12월 초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 개최 제안

3. 2011년

일 시	내 용
1.19	<p>미·중 정상회담 개최(미국 워싱턴 D.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 중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18조항으로 가장 긴 조항 - 한반도 문제를 다룬 공동성명 18조항 첫 문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북핵문제와 6자회담을 한반도 문제의 중심 이슈로 다룸
3.27~29	<p>미국 전직 고위당직자들과 북한 측 대표의 토론회, 미국의 아스펜연구소 독일지부 주최로 비공식적으로 개최(중국 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미국이 대화를 수용하지 않던 자세에서 전직 고위당직자들이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수용하려는 자세로 바뀐 모습으로 이해
5.9	<p>남북 비밀 접촉(중국 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에 북한이 먼저 비밀접촉이 있었음을 공개하면서 남측에서 돈봉투를 건넸다는 언급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어두워지는 계기로 작용
7.22	<p>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양자 비공식 회동(인도네시아 발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총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온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용호 북한 외무부 부상의 비공식 양자회동 - 남북 대표 모두 분위기가 좋았음을 전언
7.28~29	<p>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제1차 미·북 양자 회동 개최(미국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계관 부상은 회담 직후 “뉴욕회담에 만족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다자회담 전에 쌍무적 만남이 계속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
8.21~24	<p>러·북 정상회담 개최(러시아 올란우데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철도를 통한 방러 - 양 정상은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경제협력 등에 대해 합의

일 시	내 용
8.25~26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귀환 중 중국방문 (중국 후룬베이얼, 치치하얼)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철도 귀환 노선을 1,500km 단축하는 효과와 함께 - 북한의 대중·대러 균형외교를 짐작 가능
9.3~7	남측 불교계 방북 -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등,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고불법회> 참석(묘향산 보현사) 및 광법사·법운암(평양 인근) 등 방문 위해 방북 - 천안함 폭침 이후 종교단체 첫 방북
9.12~15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유니세프 친선대사 방북 - 정명훈 평양 방문, 북측 조선예술교류협회 측과 북측 어린이 대상 음악 교육·교향악단 교환 연주 등 논의
9.13~16	한·미 정상회담(미국 워싱턴 D.C.) - 한-미 FTA, 6자회담 등에 대해 협의
9.19	중·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9.21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2차 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 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이 그랜드 바젠에 대한 상당한 질문을 던졌으며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우리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논의 - 회담 직후 남북 양측은 4년 만에 만찬을 가지기도 함.
9.21~24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중단 대표 등 24명 방북 (평양·백두산) - 22일 △남북 종교인 모임 및 남북 종교인 공동성명 발표(평양), △김영남 면담(만수대 의사당) - 24일 인천공항 방북 결과 기자회견, “남북 종교인 교류 정례 화하기로”
9.22	한·중, 중·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일 시	내 용
9.26	중·북 총리회담(북한 최영림 내각총리 - 중국 원자바오 총리) 개최(중국 베이징)
9.28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 UN총회 연설 - “북한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견고하고 영구적인 평화 매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
9.30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개성공단 방문 - 이명박 정권 이후 집권여당 인물의 첫 방북 - 공단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단된 공사 재개 및 개성공단 소방서·의료시설 건립, 출퇴근 도로 보수, 출퇴근 버스 노선 연장 결정(10.11)
10.24~25	미·북 제2차 양자회담 개최(스위스 제네바) - 일련의 진전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사전 조치’ 요구 중 일부를 북한이 수용했을 것과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을 6자회담 재개 전에 미국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 - 북한이 미국에 우리나라농축프로그램(UEP)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제공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고 전언
10.27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개최(러시아 모스크바) - 한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이루어졌던 남북 간 접촉과 제네바의 미·북대화 결과 등에 대해 러시아측에 설명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언 - 한·미 양국의 6자회담 재개 선결조건에 대해 러시아도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
10.28	러·북 양자회담 개최(러시아 모스크바) - 지난 8월 24일 러·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함께 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 -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의 연쇄 회동을 통해 한·미와 북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으며 6자회담 재개를 중재하는 역할 기대 가능
11.2	한·러 정상회담 개최(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

일 시	내 용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와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외교적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전언 - 정상회담에서 남·러·북 가스관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언 <p>이명박 대통령, “김정일 만나야 한다는 원칙 없어” (프랑스 르 피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과의 인터뷰 중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은 현재까지 평양에 시간을 벌게만 해줬을 뿐, 남·북·미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진정성만 확인된다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p>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양자회담 개최(중국 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6자회담 신임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첫 회동 - 최근 열린 미·북 제2차 제네바 양자회담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6자회담 재개 방안과 절차 논의
11.12	<p>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 중국에 ‘북한 우라늄 압박’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하와이에서 가진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증단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줄 것을 요구 - 또한 클린턴 장관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북한이 매우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이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
11.14	<p>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한에 18억 9천만 달러 지급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월 북한이 경수로 사업중단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58억 달러를 물어내라는 취지의 서한을 KEDO에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요구

일 시	내 용
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58억 달러 요구는 앞으로 재개될 북핵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위해 사전정지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포석으로 풀이
11.16	<p>러·북 외교대표, 6자회담 개개방안 논의(러시아 모스크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재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가 러시아 외교부를 방문해 알렉세이 브로다브킨 아태담당차관과 면담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전언 - 김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과 양자관계 현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전언 - 러시아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문제 등을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갖는 것으로 전언
11.17	<p>청징예(成莚業)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 6자회담 재개 위한 대화노력 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일 IAEA의 한 회의에서 6자회담 관련국 모두가 회담 조기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대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 - 청 대표는 남북한, 미국·북한 회담 개최로 한반도 정세가 완호됐다고 하며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현재의 접촉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된 노력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IAEA의 대표이자 중국 원자력기구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는 중국의 입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 실제로 청 대표는 위와 같은 발언 이후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이고 한결같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유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11.18	<p>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 “북한의 불법적 핵활동 중단해야 6자회담 재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3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된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 핵활동 중단해야 6자회담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 시	내 용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ASEAN+3회의는 동남아국가연합회의인 ASEAN과 +3에 해당하는 한·중·일 3국과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여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관련국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된 자리만큼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여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분석
11.21	<p>중국, “6자회담, 동북아 안정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면서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유효한 틀”이라 강조
11.22	<p>서면 미 국무부 차관, “6자회담 재개, 갈 길 아직 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웬디 서면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을 포함한 비핵화 사전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힘
11.30	<p>북한 외무성 담화, ‘핵활동 중단’ 사실상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최첨단을 향해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의거해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할적인 문제로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 자기 할 바는 하지 않고 남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강박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 (조선중앙통신) <p>중국, “6자회담 틀 안에서 관심사 논의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 북한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추진 주장에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참가국들의 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의 6자회담 틀 유지를 강조

일 시	내 용
12.1	<p>러시아, 북한에 핵활동 중단 및 국제사찰 수용 요구</p> <p>- 러시아 외무부 공보실 논평을 통해 “우리는 한 번도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북한의 주권에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이 권리가 보편적인 핵비확산 체제의 틀 밖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뤄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북한 핵주권에 대한 인식변화 요구</p>
12.7	<p>글린 데이비스 미국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p>
12.11	<p>글린 데이비스 미국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일</p> <p>- 북한 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p>
12.13	<p>글린 데이비스 미국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중</p> <p>-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남</p> <p>미국 국무부, “6자회담 재개 관련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p> <p>-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의 발언</p>
12.14	<p>해커 박사, “북한 핵공격보다 원전사고 우려”</p> <p>- 14일 방한한 해커박사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개연성은 작다”며 이같이 발언</p>
12.18	<p>AP통신, 미국 대북 식량지원 및 북한 UEP(우라늄고농축프로그램) 중단 발표</p> <p>- 미국과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실험 중단, 2009년 추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 재입국 허용, 남북대화 재개에도 합의했다고 전언</p>
12.19	<p>북한 조선중앙방송, “김정일 사망” 공식 발표</p>

(정리: 손광수 연구인턴)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외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외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리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2,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제1차 사이오 인권포럼-북한인권 실상과 개입방안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上)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中)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下)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이상연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 - 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캐스린버티니, 린리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김석진, 김정수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사례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남경민, 임을출	9,0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도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 (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 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운,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Studies Series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 Wook, Kim Kook Shin, Park Hyeong Jung, Cheon Hyun Joon, Cho Jeong Ah
Cha Moon Seok, Hyun Sung 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 Teag, Kim Kyu Ryoon, Jang Hyung Soo, Cho Han Bum, Choi Tae 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 Ah, Suh Jae Jean, Lim Soon Hee, Kim Bo Geun, Park Young 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 Joon, Jeung Young Tae, Choi Soo Young, Lee Ki 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 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 시리즈 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통일연구원

